

## 제352호 (2012. 3. 19)

---

### ■ 경제 동향

- 주택 구매력 하락, 중산층 이하에서 더욱 현저

### ■ 정책·경영

- 뉴타운 출구 전략, 서울시 주택 수급 불균형 초래 우려
- 건전한 노사 관계와 안전한 일터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

### ■ 정보 마당

- EU의 「신재정협약」의 내용과 의미

### ■ 연구원 소식

### ■ 건설 논단 : 선거에 희생당하는 건설산업

## 주택 구매력 하락, 중산층 이하에서 더욱 현저

- 분기 소득 감소와 지방·중소형 주택 가격 상승에 기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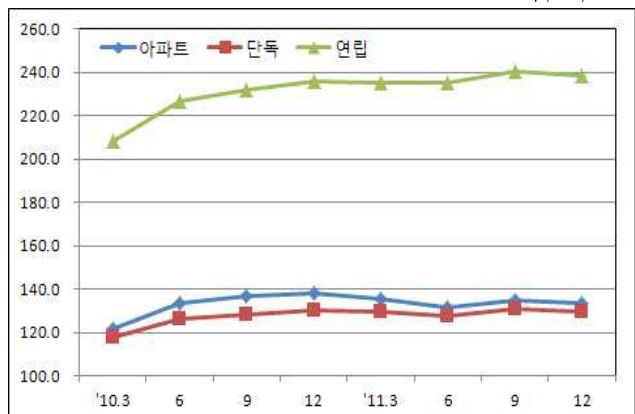
### ■ 주택구매력지수 감소

- 2011년 4/4분기의 주택구매력지수(HAI : Housing Affordability Index\*)는 전분기 대비 1.4p가 하락한 139.2p로 조사돼 주택 구매가 조금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남.
  - 주택구매력지수는 2010년 4/4분기에 141.2p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 주택구매력지수가 100 이상일 경우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중간 가격 정도의 주택을 큰 무리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지수 값이 상승하면 주택 구매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통계 작성 이후 전국 주택구매력지수 값의 범위 125~145p).
-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전분기와 비교하여 1.4p 하락한 133.6p, 단독은 1.4p 하락한 129.4p, 연립은 1.3p 하락한 238.4p를 기록하여 전분기에 비해 모든 유형에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짐.
  - 아파트는 2010년 4/4분기에 138.0p를 기록한 이후 등락을 반복함.
  - 단독은 2011년 3/4분기에 130.8p를 기록한 이후 하락함.
  - 연립도 단독과 마찬가지로 2011년 3/4분기에 240.7p를 기록한 이후 하락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1년 4/4분기의 경우 수도권이 100.9p, 6개 광역시가 214.1p, 기타 지방이 270.4p를 기록하여 수도권에서의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주택구입능력지수 추이>

(단위 : p, %, 원)

	전국 주택구입능력지수	주택담보대출금리	중위 가구 월 소득
'10. 3	126.9	5.47	3,148,918
6	138.5	4.62	3,171,688
9	141.7	4.80	3,273,966
12	143.2	4.67	3,298,400
'11. 3	141.2	4.89	3,370,853
6	137.0	4.87	3,398,381
9	140.6	5.00	3,554,303
12	139.2	4.95	3,512,495



자료 : 국민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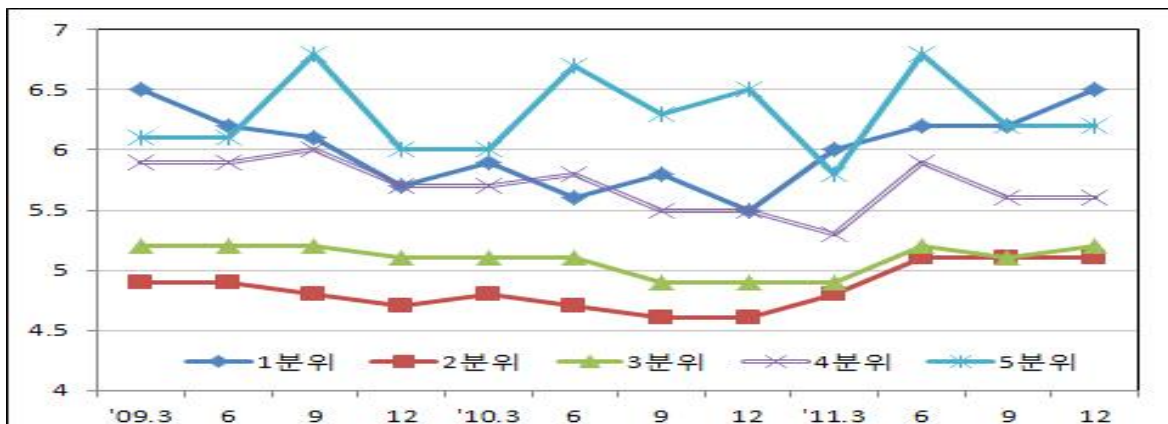
\* 주택구매력지수란 우리나라에서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 정도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HAI=(중위 가구 소득÷대출상환 가능 소득)×100)

■ PIR 값 상승

- PIR(Price to Income Ratio,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값이 중·저소득층에서는 상승한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하락하여 중·저소득층은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반면, 고소득층은 주택 구입이 약간 수월해짐.
  - 1분위 PIR 값(1분위 주택 가격/1분위 연간 소득)은 2010년 4/4분기에 5.5배를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 4/4분기에 6.5배를 보여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짐.
  - 2분위(2분위 주택 가격/2분위 연간 소득)는 2010년 4/4분기 4.6배→2011년 4/4분기 5.1배, 3분위는 2010년 4/4분기 4.9배→2011년 4/4분기 5.2배로 1분위와 마찬가지로 어려워짐.
  - 반면, 소득이 높은 4분위는 2011년 2분기 5.9배→2011년 4/4분기 6.5배를 보였으며, 5분위는 2011년 2분기 6.8배→2011년 4/4분기 6.2배로 낮아져 주택 구입이 수월해짐.

<소득 분위별 PIR 값 추이>

(단위 : 배)



주 : 주택 구입에 있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을 구입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PIR 값을 살펴보았음. 예를 들면 1분위PIR=1분위 주택 가격/1분위 연간 소득, 2분위 PIR=2분위 주택 가격/2분위 연간 소득, 나머지 분위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

자료 : 국민은행

■ 주택 실수요 계층 구매력 감소, 실수요 계층을 위한 구입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주택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의 주택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으며, 특히 실수요 계층이라 할 수 있는 1~3분위 계층의 구매력이 낮아져 실수요 계층의 주택 구입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주택 구입은 주로 실수요 계층에서 이뤄짐에 따라 실수요 계층의 주택 구입 능력 개선과 함께 주택 경기를 회복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

엄근용(연구원 · kyeom@cerik.re.kr)

## 뉴타운 출구 전략, 서울시 주택 수급 불균형 초래 우려\*

- 뉴타운 출구 전략 실효성 부족할 수도, 중장기적인 검토 필요 -

### ■ 뉴타운 출구 전략에 따른 得

- 재정비 구역 거주민의 보편적 주거권 현 상태 유지
  - 재정비 구역은 세입자 등 저소득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인하여 서민층의 보편적 주거지 유지가 가능하게 됨.
- 서울시 정책적 부담 경감
  - 뉴타운·재정비 사업 구역은 1,300개소로 동시다발적인 정비 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철거민 문제 및 아파트 위주 개발 등의 정책적 부담이 경감됨.

### ■ 뉴타운 출구 전략에 따른 失

- 정책 무게 중심의 편중성에서 오는 역효과
  - 뉴타운 출구 전략은 세입자와 영세 가옥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의견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새로운 갈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정책 변화에 따른 파생적 부담 증가
  - 재건축·재개발의 사업 시행 인가까지의 초기 소요 비용은 재건축의 경우 약 20억원, 재개발은 약 15억원으로, 뉴타운 출구 전략에 따라 실제 구역 해제가 이뤄질 경우 수백억~수천억원의 매물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 아파트 가격 상승 압력 증가, 주거 유형에 따른 부의 불균형 확대 가능성
  - 일부 고급 단독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주차 문제, 단열 및 난방 문제 등으로 인해 적정 저층 주거지가 아파트를 대체하기 위한 주거 형태로는 미흡함.
  - 아파트와 저층 주거지 사이에 주거 공간의 계층적 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저층 주거지 가구의 아파트 선호도가 매우 높음.
  - 저층 주거지에 비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로 인하여 아파트 가격의 상승 압력

\* 본고는 지난 3월 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최근 도시정비사업 정책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된 「도시정비사업 정책 변화와 주택 수급」(발표자 :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박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전체 세미나 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http://cerik.re.kr>)에서 열람 가능함.

증가 등과 더불어 해제된 정비 구역의 주택 자산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 ■ 서울시 주택 수급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의 주택 공급은 재정비 사업을 통해 연간 주택 공급량의 50%(2만 8,572호)를 충당하고 있으나, 뉴타운 출구 전략이 적용될 경우 공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
  - 출구 전략에 따른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재정비 사업에 의한 연평균 아파트 공급량 2만 8,572호 대비 53.0~90.9%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적정 공급량 대비로는 43.3~74.2% 수준으로 감소

<출구 전략 영향 대상 구역 및 주택 건립 가구 수>

구분	현재 (아파트 재건축 포함*)	구역 해제 고려	감소량	재건축 포함 감소 비율	연평균 공급량	연평균 공급량 대비(%)	적정 공급량 대비**(%)
현 상태 유지시	277,083 (308개 구역)	277,083	0	0	28,572	100	81.6
10% 축소		229,769	25,530	9.2	25,977	90.9	74.2
20% 축소		204,239	51,060	18.4	23,345	81.7	66.7
30% 축소		178,709	76,590	27.6	20,173	70.6	57.6
40% 축소		153,179	102,120	36.8	17,740	62.1	50.7
50% 축소		127,650	127,650	46.0	15,157	53.0	43.3

주 : \* 재건축 건립 가구 확정 물량(사업 승인 이전) : 21,784가구 적용

\*\* 적정 공급량은 주택 수요량 9만호에서 아파트 공급 비중 55.5%와 아파트 공급량 중 재정비 사업으로 공급된 비중 70.0%를 감안한 공급량으로 연간 35,000호로 추정함.

### ■ 정책 제언

- 서울시의 주택 수급 특성상, 특히 아파트 수급과 정비 사업 의존도를 고려할 때 당분간 정비 사업을 통한 아파트의 지속적 공급이 필요함.
  - 현재 뉴타운·재정비 사업의 지연 및 갈등 원인을 파악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사업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
  - 실태 조사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대안적 정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중장기적 시각하에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함.

엄근용(연구원 · kyeom@cerik.re.kr)

## 건전한 노사 관계와 안전한 일터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

- 경기 불황시 중요성 더욱 커져, 안정적인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중요 -

### ■ 2012년 노사 관계 전망

- 2012년도 경제성장률이 4%대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용 문제와 노동 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 등 주요 경영 현안들이 올 최대의 노사 관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4월 총선과 12월 대선 등으로 인하여 노사 관계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노사 갈등이 사회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 문제,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 고용 문제 등이 노사 관계의 중요한 정치 쟁점으로 부각될 것임.
- 지난해 7월부터 ‘복수 노조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조와 노조 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복수노조시대의 단체교섭제도도 교섭 창구의 단일화 혹은 개별 교섭의 인정 등 관행이 어느 정도 그 모습을 갖춰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인한 고용 확대가 어려워짐에 따라 근로 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적 수요에 대한 대응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

### ■ 2012년 산업 안전 보건 분야 전망

- 정부는 산업 재해의 예방을 위해 산업 안전 보건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위주의 정책 정비를 통해 감독 체계 강화와 예방 차원의 교육 및 기술 지도 등을 추진할 예정임.
  -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업장에 대한 안전 보건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처벌 위주의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였음.
  - 특히,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빙기와 장마철, 동절기 등 취약 시기에 대비한 현장 사전 감독 체계의 구축과 중소 규모 현장에 대한 집중 감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중대 재해 조사와 일반 재해 조사의 시행 및 안전 보건 교육과 기술 지도 실시 등 산재 취약 부문에 대한 재해 예방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중대 사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하여 중점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임.
- 최근 공생 발전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 안전 보건 분야에서도 공생 협력 안전 보건 활동을 활성화할 예정인 바, 협력 업체와의 ‘안전 보건 공생 협력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할 계획임.
- 특히,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안전 관리 활동 지원 등 원·하도급 업체 간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 건설기업의 대처 방안

- 당분간 건설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향후 노사 관계의 갈등 요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바, 안정적인 노사 관계 유지를 위한 대화 창구의 보완 등 노사 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체계에 대한 정비 노력이 요구됨.
- 특히, 건설 현장은 비정규직 고용이 많고, 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무 관리 체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건설 현장 노무 관리의 체계화 및 현장 소장 등 관리자들의 조직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
- 건설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기존 ‘법과 원칙’ 중심의 노무 관리 접근법만으로는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음.
-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노사 관계의 역량을 기업의 경쟁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서와 합리’에 기반을 둔 노무 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이에 따르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공생 발전 개념의 확산으로 건설업체의 산업 안전 보건 활동도 ‘관리, 감독자와 근로자’,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등 공생의 개념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내·외부에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 특히, 향후 처벌 법규의 강화 등 정책 변화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산업 안전 보건 활동은 필수적인 경쟁 요소임을 인식하고,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산업 안전 보건 활동 조직 체계 및 규정과 절차, 교육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김영덕(기획팀장 · ydtkim@cerik.re.kr)

## EU의 「신재정협약」의 내용과 의미

- EU가 '통화 동맹'에서 '재정 동맹'으로 확대되는 교두보 -

-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 국가가 유로존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재정협약」(Fiscal Pact)에 서명하였음.
- 「신재정협약」은 1996년 12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유럽 정상회의에서 체결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온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서 재정 규율(Fiscal Discipline)에 관한 내용을 개정한 것을 지칭하는 것임.
  -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에서의 재정 규율에 관한 내용은 EU 회원국의 경제 불안이 다른 회원국으로 전파되어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입국의 재정 적자(Government Deficit)는 GDP의 3% 이하로, 국가 부채(Government Debt)는 GDP의 6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신재정협약」은 조약 비준국이 12개국을 초과하면 발효되며, 협약에 서명한 25개국 가운데 24개국은 의회에서 비준을 받고 아일랜드는 국민 투표에 부치도록 되어 있음.
  - 영국은 당초부터 협약 가입을 거부했고, 체코는 의회 승인 절차 등의 문제로 가입하지 않았음.

### ■ 「신재정협약」의 내용

- 「신재정협약」은 유로존 채무 위기의 핵심 원인인 방만한 재정 운영과 그로 인한 과도한 국가 부채를 막기 위하여 회원국의 재정 운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EU 집행위원회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으로부터 차기 연도 예산안을 사전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받은 나라와 위험 국가에 대한 재정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됨.
- 기존의 「EU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규칙대로 정부 채무는 GDP의 60%, 재정 적자는 GDP의 3%를 초과할 수 없음.



- 이와는 별도로 부채 상환의 이자 부담이나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 수입의 감소 등을 감안한 구조적 재정 적자의 경우에는 GDP의 0.5%까지 인정되며, 누적 정부 부채가 GDP의 60% 미만인 재정 건전국의 경우에는 구조적 재정 적자가 1%까지 인정됨.
- 특정 국가가 이상과 같은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자동적으로 시정 절차가 개시되어 해당국은 부채 감축과 재정 적자 등에 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개선 일정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특히, 당해 연도의 재정 적자 비율이 GDP의 3%를 초과한다고 EU 집행위원회가 판정하면 벌과금 부과 등 제재 조치가 자동 개시되고 위반한 국가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회원국 전체 회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됨.
- 「신재정협약」은 EU 각국에 신재정협약 준수의 의무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 「신재정협약」의 의미

- EU 회원국 예산에 대한 중앙집권적 감독과 적자 재정 기준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자동적 제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의 개정안임.
  - 「신재정협약」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의 경제 정책 협력 방안 중 가장 포괄적인 내용 중 하나임.
- 「신재정협약」의 체결은 EU가 ‘통화 동맹(Monetary Union)’에서 ‘재정 동맹(Fiscal Union)’으로 확대되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PIGS(포르투갈·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국가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 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 ECB)의 자본시장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독일 등의 국가들이 ECB의 시장 개입을 허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임.
  - 그러나, 「신재정협약」의 체결이 유럽의 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함.

이의섭(연구위원 · eslee@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및 세미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내용
3. 12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실 주최, 중기 재정 운용 계획 작업반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li> <li>- 중기 재정 운용 계획 관련 주택 분야의 계획 수립 작업 참여</li> <li>계약제도와 주최, 적격심사낙찰제 개선 관련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이승우 연구위원 참여</li> <li>- 적격심사낙찰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li> </ul>
	미래수자원포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래수자원포럼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연구위원 참여</li> <li>- 제3주제인 '한·미 FTA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li> </ul>
3. 14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심의관실 주최, 국가 재정 관련 SOC 분야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참여</li> <li>-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수립을 위한 SOC 부문 예산 관련 자문</li> </ul>
3. 15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력수급정책과 주최, 퇴직공제제도 관련 간담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li> <li>-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피공제자 누락 방지 방안 등 퇴직공제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li> </ul>
	금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시장 관련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실장 참여</li> <li>- 부동산시장 현황 및 전망 등 객관적인 조망 및 부동산시장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논의</li> </ul>

■ 발간물 현황

일자	기관명	주요내용
건설이슈포커스	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나라 건설 하도급에 관한 규제는 「건산법」과 「하도급법」 등 2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산업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li> <li>「건산법」은 하도급 방식·비율, 원도급자의 의무 사항 및 발주자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은 원도급자의 의무·금지·권장 사항, 하도급자의 준수 사항 및 발주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li> <li>「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상의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중 하도급 거래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제하기 위하여 1984년에 제정, 1985년부터 운영하고 있음.</li> <li>「하도급법」의 제정 취지는 특정한 하도급 거래를 불공정 행위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하도급자를 구제하기 위한 데 있었음. 그러나, 하도급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가 존재해야 함.</li> <li>건설산업은 독과점 산업이 아니므로 하도급자도 다수의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음.</li> <li>따라서, 건설 하도급을 「하도급법」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하는 하도급 거래를 불공정한 거래로 인정하고 규제하는 「하도급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li> <li>그러므로 건설 하도급을 「하도급법」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건산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됨.</li> </ul>

## 선거에 희생당하는 건설산업

고맙고 반가운 인사말인 ‘공사다망하심’이 요즘 중소 건설회사에게는 전혀 달갑지 않다. ‘공사가 다 망하고’로 들릴 만큼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다고 한다. 줄어든 일감에다 수익성마저 악화되니 건설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선거의 승리를 위해 건설산업을 매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삽질경제’니 ‘토건경제’니 하면서 건설산업을 매도하고 건설투자를 마치 전시성이나 예산 낭비로 비하하고 있다. 지난 세기 한강의 기적을 선도했던 건설산업의 공로마저 송두리째 폄하되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건설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비하는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경제의 피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집과 도로와 교량이 바로 건설산업이 생산한 결과물이다. 집이 충분하다면 서민들이 전·월세로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다. 도로가 충분하다면 연간 26조원이라는 정채 비용을 낭비할 이유도 없다. 교량이 붕괴돼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안전 관리 소홀을 문제 삼을 뿐이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비용이 지불됐는지의 여부는 관심 밖이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도로 연장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이미 필요 이상으로 공급된 것처럼 왜곡하고 도로 투자를 국가 예산의 낭비라며 잘못된 지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한다. 또한, 전력이 부족해 국민들에게 절전을 강요하면서도 전력 생산 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는다. 대책 없는 ‘원전 중단’이나 ‘재생 에너지’가 마치 해답이나 되는 것처럼 오도할 뿐이다.

기업들의 일감을 줄게 만들면서 일자리를 늘리라는 일방적인 일부 정치권의 협박은 국민경제를 사지로 몰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난해관수(觀海難水)’라는 맹자의 어록을 생각하게 만든다. 건설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건설산업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의 생활기반을 책임지는 건설산업을 ‘공사판’으로 매도하는 ‘선거판’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국가 경제에서의 비중이 8%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을 단지 득표를 위해 비하해서는 안 된다. 산업에서 생산하는 집과 도로, 발전소 등을 어떻게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으로 공급해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는지가 화두가 돼야 한다. 건설산업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임을 인식해야만 한다. 자원이 없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건설산업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2012. 2. 28>

이복남(연구위원 · bnlee@cerik.re.kr)